

10일 Market Index

↑ 코스피

2871.85

(+16.08)

↑ 코스닥

771.20

(+6.99)

↓ 금리 (미국 9년)

2.385

(-0.020)

↑ 환율 (원·달러)

1365.80

(+9.45)



李 대통령 만나는 경제계, 상법개정 유예 설득 나선다

재계총수·경제단체장 회동
충실의무 확대 조항에 우려
외국인 자본 공격 가능성 ↑
전문가 “신중한 접근 필요”

재계 총수 및 경제단체장들이 이번주중에 이뤄질 이재명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상법개정안 유예를 집중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상법개정에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경제 회복과, 기업 펀더멘털 훼손을 막기 위한 장치 등이 구축되어야 한다며 속도조절의 필요성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12~13일 중 재계 총수 및 경제단체장과의 만남을 준비 중이다. 회동 대상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경제6단체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동에서 이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에 따른 글로벌 관세 정책 변화, 내수 침체와 수출 감소 등 증폭중인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경제단체와 재계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

또한 경제계 인사들은 무엇보다 정부와 여당이 주도하고 있



‘토허제’ 풍선효과… 집값 상승세 확산

10일 오후 서울 노원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집값 상승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 등을 시작으로 성북, 노원 등으로 확산하고 있다. 지난달 성북구의 상승 거래 비중은 전월 대비 4.6% 오른 46.8%를, 노원구의 경우 4.5% 상승한 46.3%를 기록했다.

/뉴시스

는 상법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면서 유예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서 경제계의 이슈가 되는 부분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과 특수관계인의 감사위원 선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3%룰’을 확대 적용하는 안 등이다. 개정안은 지난 3월 본회의 통과 직후 재계의 강한 반발을 샀고,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2~3주 안에 상법개정안 처리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

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입장이다. 그러나 상당수 전문가들은 현실을 무시한 상법 개정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주주 소송의 위험이 커지면, 기업들은 장기 투자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공격적인 인수합병(M&A)이나 연구개발(R&D)에도 제동이 걸려, 미래 성장 동력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기업의 펀더멘털을 훼손하고, 외국인 투

자 유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외국계 투기자본의 공격과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에 취약해질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다.

김대중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상법개정안이 통과 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업들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주저하기 때문에 기업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 운영이 힘들어 질 것”이라며 “기업의 활동이 곧 국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메트로경제 ‘2025 푸디노베이션 포럼’

AI가 만드는 ‘음식의 미래’

메트로경제는 창간 23주년을 맞아 ‘맛의 알고리즘, AI가 만드는 음식의 미래’라는 주제로 오는 6월 25일(수)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2025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제 ‘맛’이라는 감각조차 알고리즘이 설계하는 시대입니다. 음식은 단순한 조리의 결과물을 넘어서 데이터와 기술이 결합한 하나의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생산에서 조리, 소비에 이르기까지 인공지능과 자동화기술이 더해지면서, ‘맛의 미래’는 기술의 언어로 새롭게 써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AI와 자동화, 스마트팜 기술이 어떻게 음식의 세계를 재구성하고 있는지를 조망하는 푸디노베이션 포럼을 준비합니다. 이 포럼은 기술과 미각이 교차하는 최전선의 현장을 소개하고, 식품산업의 다음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기술의 흐름이 우리의 식문화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리고 사람과 기술의 새로운 관계가 어떤 ‘맛’을 만들어낼지를 묻는 여러 강연이 중심이 될 예정입니다. 또 푸드테크와 관련해 국내외 식품·외식·AI·로봇 관련 스타트업들이 모여 푸드테크 산업의 현재와 과제를 짚어보고 동반성장 기회를 모색할 계획입니다.

- ◆ 주제 : 맛의 알고리즘, AI가 디자인하는 음식의 미래
- ◆ 일시 : 2025년 6월 25일(수) 14:00~17:00
- ◆ 장소 : 서울 을지로 페럼타워 페럼홀(3F)
- ◆ 주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 문의 : 2024 푸디노베이션포럼 사무국 02)721-9818
- ◆ 참가비 : 사전 등록시 무료(100명 선착순, 현장등록 1만1천원)
- ◆ 이메일 : forum@metroseou.co.kr



주택 정책금융, 맞벌이 신혼부부엔 ‘그림의 떡’

30대 기혼가구 59% 맞벌이
부부 기대소득 年 0.8억 이상
주택정책금융상품 이용 불가

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일부 ‘주택 정책금융상품’의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책금융상품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득 기준이 30대 맞벌이 가구의 기대 소득과 비교했을 때 낮게 책정됐기 때문이다. 이와 비교한 청년 1인 가구의 소득 기준은 크게 넉넉해, 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결혼을 늦추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 돈·직업·집 때문에 결혼 미루는 청년들

1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이 33.9세, 여성이 31.6세로, 남녀 평균은 약 32.8세다. 지난 2006년 처음으로 30세를 넘긴 남녀 평균 초혼 연령은 19년 연속으로 30세를 웃돌았다. 높아진 취업 연령, 결혼 비용 증가,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결혼을 미루는 청년이 늘고 있어서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 4월 공개한 국민인구행태조사에서 전국 20~44세 가운데 남성의 41.5%, 여성의 55.4%는 결혼의

향이 없거나 결정하지 못했다고 응답했다.

남성은 ▲비용이 부담돼서 ▲일에 충실하고 싶어서 ▲소득이 부족해서 등을 이유로 들었고, 여성은 ▲기대에 맞는 상대가 없어서 ▲일을 우선하고 싶어서 ▲비용이 부담돼서 등을 이유로 들었다. 남녀 모두 비용과 직업 활동에 대한 우려가 컸다.

직업 활동에 관한 관심이 늘면서 청년 부부의 ‘맞벌이’ 비중도 높아졌다. 지난 2023년 기준 30대 기혼자의 맞벌이 가구 비중은 58.9%에 달했다. 모든 세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30대의 최우선 경제활동 목표는 ‘내 집 마련’과 ‘전세자금 준비’다. 지난 2023년 기준 전국의 유주택 가구는 1245만 가구다. 이 가운데 30대 가구주는 114만 명에 불과했다. 40대(249만명)와 50대(314만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전세로 옮겨가지 못해 월세에 머무는 비중도 높다. 지난해 1985~1989년생 가운데 21.3%는 월세에 거주했다.

◆ ‘맞벌이 부부’가 ‘1인 가구’보다 대출 어렵다

청년 세대의 불안정한 주거 환경이 결혼을 늦추고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이어지는 만큼, 정

부는 시중은행 대출보다 금리 및 대출에 필요한 신용점수가 상대적으로 낮은 주택 정책금융상품을 내놴다.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과 전세자금지원 상품인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등이다.

그러나 정책금융상품의 소득 기준이 과도하게 낮아 30대 기혼 가구의 약 60%에 해당하는 맞벌이 가구는 실질적으로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책금융상품은 소득이 기준 이하여야 이용할 수 있다. 기혼 가구는 부부 합산 소득으로 기준을 책정하는데, 상품별 소득 기준(세전)은 5000만~85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30대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4006만원이었는데, 성별과 무관한 평균인 만큼 부부

소득을 단순 합산하면 기대 소득은 약 8012만원이다. 기대 소득만으로도 일부 상품은 이용이 불가하다.

전세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소득기준 5000만원, 금리 연 2.5~3.5%)과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소득기준 7500만원, 연 1.9~3.3%)은 사실상 이용이 어렵다. 합산 소득 8500만원까지 이용 가능한 디딤돌대출(연 2.85~4.15%)과 신혼부부 구입자금대출(연 2.55~3.85%)은 소득이 높을수록 금리가 높게 책정돼 시중은행 상품과 비교해 금리 경쟁력이 높지 않다.

일부 상품은 신혼부부 외에도 ‘청년 우대’를 운영하고 있어 청년 1인 가구의 대출 문턱이 더 낮은 현상도 발생했다.

〈4면에 계속〉

/안승진 기자 asj1231@

메트로 한줄뉴스



▲미·중·일 정상 통화 마친 이 대통령… 시진핑보다 이시바와 먼저 통화
▲정부,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 인청요구안 국회 제출
/사진 뉴시스

▲우원식 “국회 공간서 협력 중요” 우상호 “이 대통령, 국회 존중·소통 원칙 지킬 것”
▲민주·조국혁신당 “이주호, 현안질의 출석해 리박스를 전말 밝혀야”

▲방사청, ‘절충교역 매칭’ 방산 중소기업 수출 지원
▲“광주 남구 시설공단 위탁·대행 사업, 의회 동의 받아야”